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1. 5.(일) 11:00,
(지면) 2023. 11. 6.(월) 조간

배포 2023. 11. 3.(금) 오후

“청년 선원 이탈 막자” 노·사·정 대타협 15년 만에 이뤄졌다

-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2023. 7. 발표)」 이행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6일(월)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서울 여의도)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노사합의서에는 ▲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4개월), ▲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또한,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었기에 양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정부 역시 15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석 (044-200-5740)
		담당자	서기관	안준영 (044-200-5745)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대량의 필수물자(원유, 액화가스, 석탄, 철광석 등)를 국내로 안전하게 수송함으로써 물가 안정 등 민생과 경제 안보 유지에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특히 우리 해운산업은 지난 2017년 한진해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되찾았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에서 국가 공급망을 공고하게 지켜내었다. 그 결과 2022년 해운산업이 역대 최대의 연간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세계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고국을 떠나 망망대해에서 격리된 생활을 감내하면서 책임과 역할에 충실히 임한 우리 선원들의 희생과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선원들은 고된 근로환경으로 인해 배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해운산업은 어렵게 되찾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이는 곧 민생과 국가 경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노’ 라 한다), 한국해운협회(이하 ‘사’ 라 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이하 ‘정부’ 라 한다)는 지난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함께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1. 노·사는 지난 2007년 12월 28일 서명한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계승하며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이하 ‘국제선박’ 이라 한다)에 최소한 한국인 선원(예비원 포함) 5,00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 노·사는 정부가 지난 7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반영하여 한국인 선원의 일과 삶 균형 회복을 위해 승선 후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승선주기, 유급휴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3. 노·사는 국가필수선박 및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를 도입하며, 일반국제선박으로 한정하여 외국인 선장 및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데 합의하였다.

4. 정부는 노·사 간 합의가 한국인 선원의 의무 고용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노·사 간의 합의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방안의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증진과 국제 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선박등록법」, 「선원법」, ‘통세제도’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정부는 국제 선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선원기금’ 조성 결정을 환영하며, 노·사·정부는 동 기금이 선박 내 인터넷 환경 개선 등 한국인 선원의 양성·고용 확대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별 첨 :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서』 (2023. 11. 6)

2023년 11월 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성용

한국해운협회
회장 정태순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별첨 2

노-사 합의 주요 내용(시행일 : '24. 1. 1. 부터)

□ 휴가제도 개선

- 승선 후 4개월부터(현재 6개월) 유급휴가 권리 부여
- 유급휴가 일수 현행에서 2일 가산

□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제도 도입

- 국제선박 1척당 승무하여야 하는 한국인 선원 최소 기준을 정함
(현재는 1척당 최대 외국인 수를 정함)
 - 국가필수선박 : 1척당 11명('24~) → 10명('25~)
 - 지정국제선박 : 1척당 8명
 - 일반국제선박 : 1척당 2명(선장 및 기관장)
- * 국가필수선박 및 지정국제선박 운용하는 선사별 척수에 비례하여 일반국제선박에 한해 외국인 선장 및 기관장 시범 고용 추진
- ** 국가필수선박 및 지정국제선박 중 국책사업 LNG 운반선의 경우 1척당 외국인 부원선원 최대 8명까지 승선 허용

□ 선박 내 인터넷 환경 개선

- 육상의 무선인터넷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 및 협의체 운영

□ 선원기금 조성

- 톤세 절감액 등을 활용하여 해운분야 한국인 선원의 양성·고용 확대 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사용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